

“차별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 도시, 복지 서울”

원 순 씨 의 10대 복지 정책

2014. 5. 24.



차

I.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완전 실현

- ① 2배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복지플래너가 가정으로 찾아갑니다. 1
 - 사회복지사 2,000명 신규 채용을 통해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
 - 방문간호사 400명 신규채용으로 2배 확충
 - 동주민센터를 민·관협력 복지허브로
- ②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, 서울형기초보장제 확대를 통한 보편복지 실현, ‘사람이 중심인 서울, 삶이 편안한 서울’을 만들겠습니다. 2
 -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서울형기초보장제 대상자 확대
 - 서울시민복지기준 완전 이행
- ③ 민·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거버넌스 확립,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통해 신바람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 3
 - 시민·복지기관종사자·공무원의 민·관복지거버넌스 운영
 - 종사자 평균급여 공무원 대비 95%수준 달성
 -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실시 및 노후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원

II. 주거복지와 금융복지까지!

- ④ 8만호 추가 공급 및 서울형 주거급여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로 거듭납니다. 4
 -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추진
 - 수요자 맞춤형 서울형 주거급여제도 강화
 - 주민자율참여형 주거복지 기반 강화
- ⑤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및 청년두배통장 추진을 통해 민생을 보듬고,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. 5
 -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
 - 저소득 청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‘청년두배통장’추진

III. 누리는 촘촘한 복지 실현

- | | |
|---|----|
| <p>⑥ 30개소 설립 및 데이케어센터 100개소 확충, <환자안심병원> 1,000병상 확충, 치매예방기능 강화 통해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노인요양원 30개소 설립 및 데이케어센터 100개소 확충 -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1,000병상 확대 (5개 시립의료원) - 위한 <기억키움학교> 확대 - 돌봄지원센터 권역별 4개소 설치 - 어르신요양정보안내시스템 구축 | 6 |
| <p>⑦ 탈시설화 지원,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설립,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차별없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-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설립 -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및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| 7 |
| <p>⑧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 다(多)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실현하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주민 인권팀 신설 및 시립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- 사법통번역서비스 지원 확대 -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취업지원 강화 - 중국동포 자립역량 강화 및 민관협의회체 구성 | 8 |
| <p>⑨ 1,000개소 확충, 아동학대 예방 및 우리아이 주치의 제도를 통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공립어린이집 1,000개소 확충 -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및 일시보호시설 확충 - ‘우리아이 주치의 제도’ 도입 | 9 |
| <p>⑩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명중심 서울, 동물도 함께 보호받고 존중되는 서울형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형 동물보호제도 구축을 통한 인도적 동물보호시스템 마련 -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동물보호 관리·감독 강화 | 10 |

①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복지플래너가 가정으로 찾아갑니다.

☐ 및 문제점

- 및 지방정부의 복지가 확대되는 현실에 비해 복지인력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, 업무과중으로 인해 복지공무원의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현실
-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현장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되었으며, 사회복지인력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함
 - 세모녀 자살 사건과 같이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신청주의로부터 ‘찾아가는 복지패러다임’으로의 전환 필요
 -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·관 협력의 장(長) 필요

☐ 개선방안

- 사회복지사 2,000명 신규 채용을 통해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
 -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
 - 신생아 출생 시, 어르신 70세 도달 시 사회복지사가 가정으로 방문, 맞춤형 복지제공
- 방문간호사 400명 신규 채용으로 2배 확충
- 동 주민센터를 민·관협력 복지허브로 재편
 - 동 주민센터를 복지와 보건, 주민자치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허브로 재편
 - 마을 단위에서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와 복지행정공무원이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능 강화 필요, 이를 위해 주민센터 리모델링 실시

②

완전이행, 서울형기초보장제 확대를 통한 보편복지 실현, ‘사람이 중심인 서울, 삶이 편안한 서울’을 만들겠습니다.



및 문제점

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및 기준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고, 전국적인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 반영 미흡

-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 보장 필요
 - ‘12년 마련한 시민복지기준 설정 및 재정취약 자치구 지원확대 필요
-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, 계층별, 연령별 등 집단 간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,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일수록 복지비 부담이 높음
- 서울형기초보장제 실시로 2013년 기준 비수급빈곤층 2만3천명에게 복지급여 지급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확대 방안 필요



개선방안
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 대상자 확대 발굴
 - 2014년 최저생계비 80%로 선정기준 확대
- 서울시민복지기준 완전 이행
 - 2014년 비수급 빈곤층 지원확대를 통해 최저기준 실현 강화, 적정기준 달성 로드맵 마련
 - 성과지표(36개) 및 추진사업(102개)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

③ 민·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거버넌스확립,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통해 신바람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☐ 및 문제점

사회복지 서비스를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의견 반영 등 민·관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

-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행복한 복지현장 실현 및 시민복지체감도 향상 필요

☐ 개선방안

- 서울시민, 복지서비스 생산자, 서울시청 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·관사회복지거버넌스 체계 구성
- 동 주민센터를 민·관협력 복지허브로 재편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급여가 공무원 급여의 95%에 이를 수 있도록 추진 (2014년)
 - 지역아동센터 및 여성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 대비 임금 수준이 더 낮은 직종부터 처우개선 방안 마련
-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및 노후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지원

안심주택 8만호 추가공급 및 서울형 주거급여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로 거듭납니다.

□ 및 문제점

가구 구조의 변화(1인 가구 증가), 평균 가구인원의 감소(2010년 기준 2.7명)에 따라 주택시장 소형화, 임대 및 월세 중심으로 주택시장 재편

○ 주거비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증대

– 임차가구의 47.8%(98만 가구)는 소득의 25%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, 36.2%(75만 가구)는 소득의 30%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

– 2013년 서울시 전세가격 평균 6.6% 상승, 최근 5년간 32.6% 상승

○ 개발,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주거공동체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

□ 개선방안

○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추진

–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준공공형 민간임대 주택 도입(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업체 참여 확대)

–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‘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’ 시범 도입

– 20~30년간 매매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도입

○ 수요자 맞춤형 서울형 주거급여제도 강화를 통한 주거선택권 보장

– 서울형 주거급여 소득기준 완화(최저생계비 150% 이하)를 통한 대상자 확대 및 틈새계층 발굴·지원, 주거급여 지원예산 단계적 확대 (2013년 대비 2018년까지 10배 수준)

○ 주민자율참여 주거복지 기반 강화

– 자치구별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,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주거 문화 확립 지원, 공공토지임대형 주택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

확대 운영 및 **청년두배통장** 추진을
통해 민생을 보듬고,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.

☐ 및 문제점

물가상승률에 비해 실질가계소득 증가는 담보하는 반면 주거비·교육비 등 가계 부담 증가하여 가계부채 1,000조 시대 도래

- 채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가계급증 및 가계부실 심화
- 청년실업의 증가(2013년 기준, 8%), 청년고용률(15~29살)은 39.7%에 불과, 실업과 구직활동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
- 저소득 청년층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

☐ 개선방안

○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

- 금융복지상담센터 현 7개소에서 '15년까지 10개소로 확충
- 채무조정 이외에도 일자리·임대주택 등과 연계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
- 법원·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'개인파산·회생 전담재판부'운영 효율화

○ 저소득청년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'**청년두배통장**' 추진

-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 추진해왔던 '희망플러스통장'을 청년으로 확대
- 만18~35세의 최저생계비 200% 이하의 청년 1,000명 대상
- 본인저축액(50%)+시비예산·민간후원(50%) 매칭 지원
- 생활경제교육과 가계부쓰기, 소모임 활동을 통해 채무조정 및 재무컨설팅 병행

⑥ 30개소 설립 및 데이케어센터 100개소 확충,
<환자안심병원> 1,000병상 확충, 치매예방기능 강화 통해
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.

☐ 및 문제점

공공노인요양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입소 대기 중

-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밤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부족
 - 재가복지기관(주야간보호)의 자치구별 시설 수 차이로 인해 접근성 제약
 - 은평구 16개소, 종로구·중구 4개소
- 장기중증질환 어르신 가족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환자안심병원 부족
- 경증치매어르신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에 제약
- 어르신 요양기관의 서비스의 질, 이용자의 평가, 대기인원 등 정보제공 시스템 부재
- 요양시설종사자의 약 61%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재

☐ 개선방안

- 공공노인요양원 30개소 설립
 -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인요양원을 30개소 설립하여 입소대기시간 대폭 단축
- 데이케어센터 100개소 확충
 - <3-TEN 프로젝트>를 통해 집에서 10분 이내, 밤 10시까지, 구별 최소 10개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 100개소 확충
-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확대
 - 5개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보호자 없는 병상을 연차적으로 1,000개 확대
- 치매예방강화와 경증치매어르신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<기억키움학교> 확대
- 요양보호사 돌봄지원센터 권역별 4개소 설립
- 어르신 요양정보 안내시스템 구축
 - 어르신 요양기관 서비스의 질, 이용자의 평가, 대기인원 등 정보 제공

7 탈시설화 지원,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설립,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차별없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.

☐ 및 문제점

시설중심의 복지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 복지패러다임 전환

-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 부족
-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상해, 사망 등 발생

☐ 개선방안

- 장애인 탈시설 추진 및 자립지원
 - 향후 5년 이내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20%(약 600명)까지 탈시설 추진
 - 자립생활공동체, 체험홈, 자립생활가정, 공동생활가정, 개인독립가정 마련
- 장애인 학습센터 설립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지원
 -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
 - 장애인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 복합문화공간 <어울림 플라자> 건립
-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
-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강화, 일자리 확충
-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

⑧ 이주·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다문화도시 서울, 다(多)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실현하겠습니다.

☐ 및 문제점

2013년 기준 서울시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40만 명, 서울 인구의 3.9%에 해당
근로자 29%, 외국국적동포 20%, 결혼이민자 12, 유학생 7%

- 이주·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선진 다문화도시 정책 미흡

☐ 개선방안

- 외국인주민 인권팀 신설로 효율적인 인권정책 추진 기반 조성
- 시립 외국인주민센터 설치
 - 당장 거처 확보가 어려운 외국이 주민을 위해 권역별 1개소 설치
-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신설로 외국인 주민참여제도 확장
- 사법통번역서비스 지원 확대
 - 사법통번역사 양성, 외국인주민 법적 분쟁 발생 시 통번역 지원
-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장학금 지급 등 지원 확대
 - 결혼이민자 본인과 자녀의 자립과 정착지원을 위해 대학생 결혼이민자 장학금 연 50명에게 지급
 -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전문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
- 자방자치단체 최초로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('16년 개소)
- 중국동포 자립역량 강화 및 민관협의체 구성
 - 서남권 글로벌센터를 중국동포 거점 지원센터로 운영

9 1,000개소 확충, 아동학대 예방 및 ‘우리아이 주치의’
제도를 통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.

☐ 및 문제점

2013년 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의 11.1%에 불과하며,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입소까지 2~3년의 시간이 걸림

- 아동학대 예방 및 방과후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
-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과정별 건강관리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

☐ 개선방안

- 국공립어린이집 1,000개소 확충
 - － 공공유희공간 및 도시공원 활용,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국공립화, 기업 등의 무상공간 등을 활용한 민·관연대방식으로 확충
- “아동학대 없는 도시 서울” 프로젝트
 - －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설치(구별 1개소)
 - － 학대 피해아동 긴급보호와 치료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충
- 방과후 아동돌봄 공공책임제 시행
 - － 공공 방과후 지원센터 허브기관 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
- 0~12세 아동에 대한 “우리아이 주치의 제도” 도입
 - － 지역병원들과의 민·관협력 방식을 통한 주치의 제도 실시

⑩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명중심 서울, 동물도 함께 보호받고 존중되는 **서울형 동물보호정책**을 추진하겠습니다.

□ **및 문제점**

서울시 반려동물 가구의 비율은 27%에 이르며, 동물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

- 인간의 동반자로서 동물이 존중과 보호를 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관계 정립 필요
- 연간 1만5천여 건의 ‘발견된 동물’ 발생. 반려동물 유기 및 비인도적 동물학대 사건을 방지하는 한편,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필요

□ **개선방안**

- **서울형 동물보호제도 구축**을 통한 인도적 동물보호시스템 마련
 - － 권역별 직영 동물보호센터 4개소 설치 및 길고양이 관리방안 인도적 개선
 - － 동물쇼·동물체험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
 - － ‘발견된 동물’ 분양센터 확대 및 온라인 입양사이트 운영
- 인간과 동물이 함께 쉴 수 있는,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**반려견 놀이터 조성**
 - － 2013년 1개소 시범운영, 2014, 2015년 연간 2개소 설치(총 5개소 마련)
- **동물보호를 위한 관리·감독 강화**
 - － 동물보호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물보호 구조·신고·교육·홍보 등을 담당하는 동물명예감시원 확충
 - － 비인도적 동물학대에 대한 시민감시 체계 구축